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이 찬 우*

- I. 머리말
- II. 북핵과 일본의 경제관계
- III. 북일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 전망
- IV. 맺음말

요 약

북한과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식민지시대로부터 ①만주와의 연계 개발, ②식민지적 산업개발, ③신공업도시 개발 등을 위해 전력개발, 철도 및 항만 건설이 단기 집중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이익과 일본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및 일본을 경제적으로 통합한 지역단위로서의 개발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전후 전쟁복구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이 만들어놓은 공업기반, 즉 제철, 비철금속, 석탄, 전력, 화학, 시멘트 공업 등을 기반으로 기계공업을 강화하면서 자립적 경제건설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설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일본으로서도 북한의 무연탄, 철광, 비철금속 등의 광산물, 수산물 등의 수요가 있어 북일무역은 상호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북한의 무역채무 변제연기 등에 따라 일본 무역상사의 철수가 발생해서 북일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주로 재일동포 상공인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그후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실시하였고 2009년 6월 이후는 북일경제관계는 전면적으로 동결되어 있다.

2009년 9월 16일에 일본에 하토야마 신정권이 들어섰다. 신정권은 정권이 안정된 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구상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정세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일간에는 199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과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과거청산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정부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동경국제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비상근강사

북일간의 정부간 경제협력이 주로 산업생산 정상화와 산업인프라 개발, 그리고 인재육성 및 환경협력 등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향후 다가올 일본과의 수교에 대비한 경제개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며,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 북일간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틀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2009년 9월 16일 일본에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내각이 들어섰다. 1993~1995년의 정권교체를 제외하고 전후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정권이 8월 31일의 총선거에서 완패하고 민주당의 압승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일본에 새로운 정치가 시작하게 되었다. 탈관료의존을 내건 민주당의 정치가 결국은 자민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정치가 구태를 벗고 새로운 눈으로 행정과 외교, 복지, 노동, 환경 등 제반 문제에 접근하기를 일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유독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일본의 분위기로 인해, 민주당 신정권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바로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중의원 총선거시 민주당이 내건 선거공약의 제52항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향하여 아시아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고 약속하면서도, 제53항에서는 북한문제를 특별히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즉, ①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일본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② 핵, 화학, 생물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 보유, 배치를 포기시키기 위해 미, 한, 중, 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화물검사 실시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③ 납치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의 책임하에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대북 입장은 패배한 자민당이 선거공약에 내건 ① 납치문제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북한이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관련활동을 단념하도록 일본은 수출금지 등 대북한 조치를 계속한다, ③ 국가의 위신을 걸고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실현한다 등의 공약 내용보다는 덜 단호하다고도 할 수 있고, 외교적인 대화해결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토야마 신정권이 먼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면서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정권이 안정된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대한 구상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정세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토야마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일본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의 현실과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북일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비한 전망을 그려보고자 한다.

II.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1. 북일경제관계의 현황

2006년 12월 이후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북한에 대해 수입전면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2009년 6월 18일부터 2010년 4월 13일 기한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조치도 실시되면서 현재 북일간의 경제관계는 통계로는 제로(0)이다.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2006년 7월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 같은해 10월의 유엔안보리결의에 바탕한 '북한핵실험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의 내용으로서 모든 북한산의 물품의 수입금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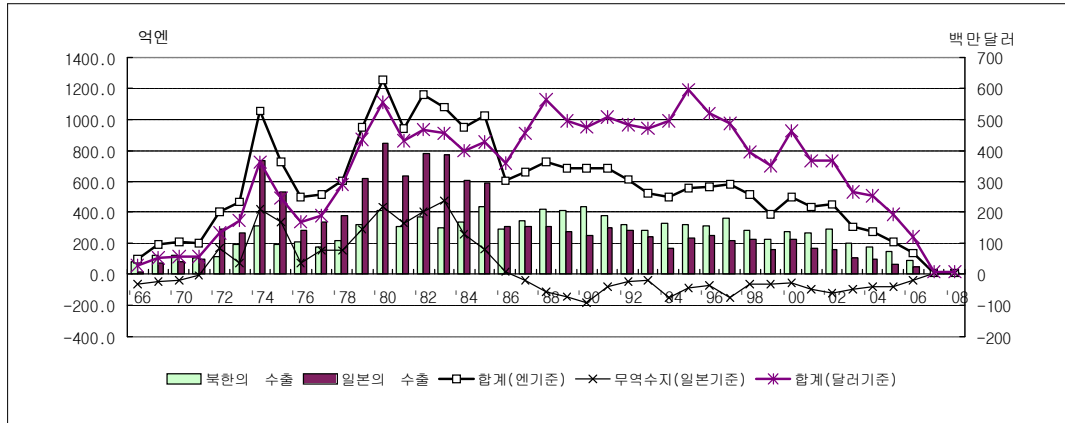
선박의 일본입항금지, 북한국적자의 일본입국 금지, 소고기, 양주, 담배, 승용차 등 사치품목 24종류의 대북수출 금지 등을 실시한데 이어, 2009년 4월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5월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결의로서 북한화물의 공해상에서의 검사 실시, 인도개발목적의 제외한 신규 용자 및 원조 금지, 모든 무기의 금수, 송금규제 강화 등 일련의 경제제재조치에 부응하고 또한 독자적인 전면 수출금지까지 실행하는 셈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북일간에는 사람, 돈, 물건이 전혀 직접 왕래하지 못하는 암흑의 관계로 되었고, 그동안 북일무역에 종사하였던 일본의 무역상사나 재일동포 무역상사들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접거나 새로운 무역상대를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러한 북일관계의 현황이 즉각 개선되리라라는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북일관계의 현안이 해결되고 과거청산이 이루어져 국교가 정상화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북일 양국이 모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 6월 북일무역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의 북일무역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중단된 반면 일본의 대북 수출은 감소하면서도 이어져왔다. 먼저 북한의 대일 수출은 2000년 2.6억달러

〈그림 1〉

북일무역의 추이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수준에서 감소하여 2006년 7,600만달러 수준으로 되었고 2007년 이후 중단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북 수출은 2000년 2.1억달러 수준에서 감소하여 2006년 4,400만달러 수준으로, 2008년에는 760만달러, 2009년 1월~6월간에 27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중단 상태이다.

북한은 1972년이후 1986년까지 일본에 무역적자를 보여오다 1987년 이후 2006년까지 무역흑자를 실현하였다. 1972년이후 1986년까지의 무역적자총액은 3,770억엔, 1987년이후 2006년까지의 무역흑자총액은 1,764억엔으로 1970년대 이후만을 고려한다면 2,000억엔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북일간의 무역품목을 보면, 북한은 2006년까지 주로 수산물, 알루미늄괴·아연괴·선철 등의 금속제품, 무연탄·마그네시아크

링커·모래·천연흑연 등의 광물, 전기기기 및 방직용 섬유제품의 임가공, 송이버섯 및 약용식물 등의 농산물 등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일본은 주로 버스·승용차·트럭·자전거 등의 수송기기, 섬유제품 및 전기기기의 임가공원료, 내연기관·에어콘·냉장고·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화학공업제품, 기타 구두, 담배, 냉동소고기, 위스키 등 소비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였다. 소비제품 중 담배, 소고기, 위스키 등 사치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2006년 12월부터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었다.

북한의 수출품 구성에서는 1980년대까지 주요 수출품이었던 금속제품과 광산물의 수출이 1990년대 이후 대폭 줄어들고, 수산물의 수출이 200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후

〈표 1〉 북일무역의 품목별 추이

단위: 백만엔

북한의 수출	1980	1986	1990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6월)
섬유제품	3,030	1,289	5,850	13,498	7,400	7,191	6,828	4,310	2,804	1,491	877	-	-	-
식물성상품	3,033	3,869	7,718	4,427	2,826	555	1,354	1,065	1,008	1,875	822	-	-	-
동물성상품	5,906	6,216	6,555	6,118	9,644	12,513	14,148	9,043	7,712	4,002	2,806	-	-	-
광산물	9,349	4,683	5,515	3,354	2,306	2,690	2,474	1,685	1,502	2,436	1,102	-	-	-
금속제품	19,170	11,166	16,894	2,569	1,964	1,049	1,451	1,550	2,287	2,770	1,895	-	-	-
전기기기	-	-	-	940	2,494	1,905	1,666	1,830	2,032	1,658	1,101	-	-	-
기타	490	2,050	764	798	1,062	708	793	652	292	172	270	-	-	-
합계	40,977	29,273	43,296	31,703	27,695	26,612	28,715	20,135	17,637	14,403	8,87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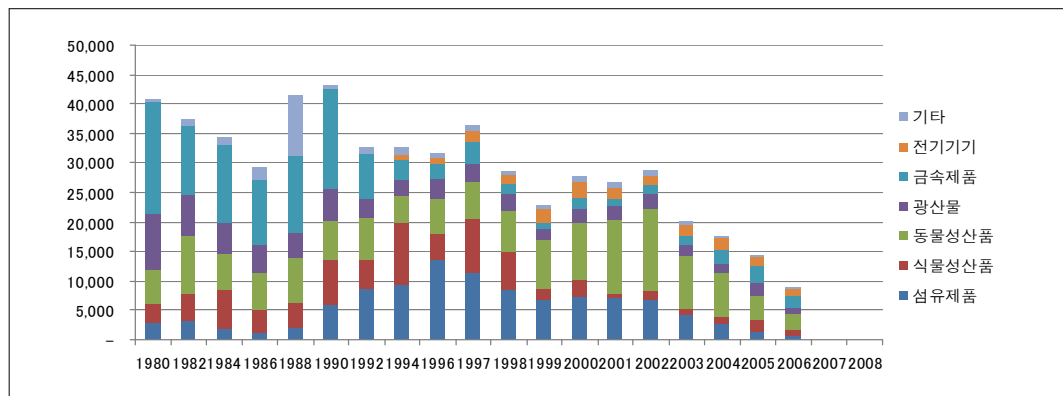
일본의 수출	1980	1986	1990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6월)
섬유류	6,487	946	600	8,196	4,814	4,847	4,143	2,545	1,707	905	521	74	54	33
광물제품	4,079	578	327	2,908	1,030	67	69	42	51	27	22	8	19	3
수송기기	10,654	3,873	1,422	2,845	4,305	3,566	4,692	3,343	3,717	3,001	2,476	359	91	-
전기기기	7,173	3,323	2,094	1,889	3,212	2,341	2,140	1,277	782	533	465	39	38	15
기계류	24,644	6,302	5,886	1,785	1,854	2,107	1,688	941	739	454	292	152	100	55
플라스틱, 고무	4,440	2,179	2,159	1,067	664	923	847	604	493	331	179	70	92	14
금속제품	13,685	4,421	2,463	1,003	559	594	473	233	381	223	164	41	77	14
재수출	-	-	-	2,209	3,914	1,060	942	495	396	284	215	11	40	6
기타	13,784	9,417	10,431	2,793	1,928	1,664	1,561	1,119	1,369	1,125	753	341	282	122
합계	84,946	31,039	25,382	24,695	22,279	17,169	16,554	10,599	9,635	6,883	5,088	1,096	793	262

무역계	125,924	60,312	68,678	56,397	49,975	43,781	45,269	30,734	27,272	21,285	13,960	1,096	793	262
-----	---------	--------	--------	--------	--------	--------	--------	--------	--------	--------	--------	-------	-----	-----

자료: 일본 재무성 통관통계

〈그림 2〉 북한의 대일수출 품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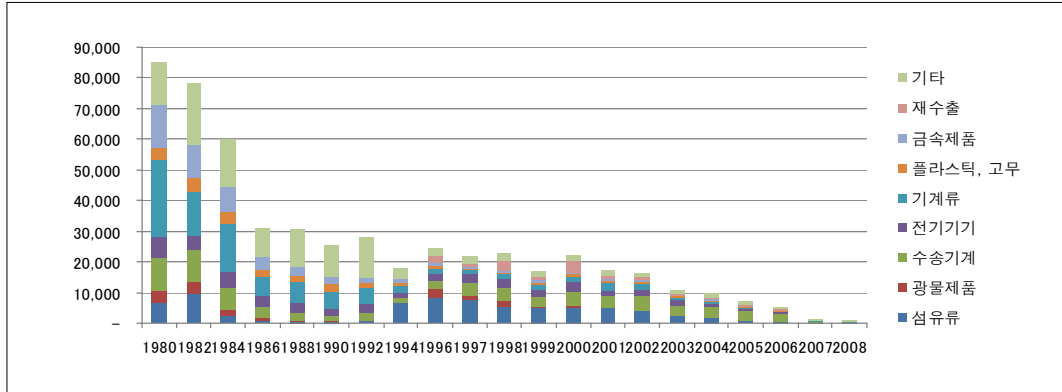
단위: 백만엔



〈그림 3〉

일본의 대북수출 품목별 추이

단위: 백만엔



다시 줄어들었으며, 섬유제품의 입가공은 1990년대 중반 피크를 이루다 그후 감소하였다.

일본의 수출품 구성에서는 기계류의 수출이 1986년 이후 대폭 줄어든 반면 1990년대 이후 섬유류와 수송기기의 수출이 늘어났다. 1990년대에 섬유제품의 입가공이 북일무역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섬유제품의 입가공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수송기기 및 기계류, 화학제품의 수출이 중심이었다. 수송기기는 2006년에 버스 501대, 승용차 1,468대, 트럭 2,938대, 특수자동차 43대, 자전거 14,269대가 수출되었으나, 2007년에 버스 48대, 트럭 213대로 대폭 줄고 대신 자전거가 14만대로 대폭 늘었다가, 2008년에는 버스 1대 자전거 48,491대로 감소하였고, 2009년은 6월까지 한 대도 수출되

지 않았다. 한편 화학공업제품은 주로 의약품, 백신, 페인트, 비누 등이다.

2. 북일경제관계의 과거 역사로부터의 교훈

1) 식민지시대의 북한지역 산업개발과 일본

a. 무연탄 생산과 일본으로의 수송 : 원산 북항

북한지역은 품질 좋은 무연탄 산지로 19세기말부터 유명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영국제 무연탄을 사용하는 함선을 영국에서 제공받았던 것이 큰 요인이기도 했다. 일본 해군은 중유가 연료로서 등장하기까지 무연탄 공급기지를 해외에서 확보하

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는데 한일합방 이후 북한지역의 평안도는 화력이 좋고 연소시간이 긴 무연탄 산지로서 중시되었다. 특히 평양근교의 무연탄이 유명하여 평양은 탄전위의 도시라는 의미로 [炭都]로 불리게 되었다. 무연탄은 군수용으로서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가정연료의 민수용으로, 그리고 일반 및 철도기관차보일러용, 제철연료용, 화학공업원료용(카바이트, 시멘트 생산), 양잠업(생사 생산)을 위한 산업용으로 중시되어 일본경제 및 식민지 조선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b. 유연탄(역청탄, 갈탄) 생산과 철도연료사용

북한지역의 유연탄은 대부분이 갈탄으로, 역청탄(코크스탄)은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유연탄 산지가 평안도의 안주와 더불어 함경북도의 회령, 길주, 명천, 함경남도의 함흥 등에 분포해 동해안지역이 주요한 산지로 되었다. 갈탄은 주로 철도기관보일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화학물질함유량이 높아 1930년대 이후 인조석유 원료로 중시되었다.

북한지역의 서부지역 탄광은 주로 메이지(明治)광업이 개발하였는데 안주탄광은 1912년부터 개발하였고(1945년에 연산 25만톤 규모), 사리원탄광을 1914년부터 개발하였다(1937~41년 연평균 30만톤규모).

한편 동부지역 탄광은 1930년대 후반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1939년에 북선(北

鮮)탄광, 동양척식, 동척광업, 아소(麻生)광산 등 4개사가 공동설립한 조선유연탄주식회사가 함경북도 경원군, 회령군, 온성군, 함경남도 함흥, 신흥군 지역의 갈탄광을 개발하였다.

c. 광물 개발

북한지역에는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텅스텐, 마그네사이트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철광석 또한 풍부하게 매장되어, 이들 광물은 희토류를 포함해 군수공업에 불가결한 관계로 193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군수용 광물의 수요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 지역의 광산에 의존하였다. 철광의 경우 대표적인 산지는 함경북도 무산철광이었다. 이 철광은 당초 미츠비시제철의 소유였는데 1935년에 미츠비시제철이 일본제철에 병합되면서 미츠비시광업이 계승하였으며, 1939년에는 미츠비시광업, 일본제철, 일철광업 3사가 공동설립한 무산철광개발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었다. 이로써 무산철광은 청진제철소를 소유한 일본제철의 철광원료공급기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광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시멘트산업의 원료로서 중요한 석회석이 전국적으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동해안지역에 시멘트공장 건설의 배경이 되었다.

d. 금속공업

철광생산을 배경으로 동해안지역에 대형

제철소건설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제철소는 일본제철청진제철소이다. 1939년에 건설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청진항의 전용항 건설도 진행되었다. 당시의 계획으로는 무산의 철광석과 만주의 밀산(密山) 및 학강(鶴崗)탄광에서 코크스탄을 수송받아 선강(銑鋼)일관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일본제철이 자본참여하고 조선마그네사이트개발, 북선탕식철도, 무산철광개발 외에 일본로제제조청진공장, 밀산탄광 등 관계회사 및 공장이 설립되었다. 1944년의 선철생산량은 약 23만톤이었는데, 지금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전신이다.

미츠비시광업은 1939년에 제강공장을 청진에 건설하여 1943년까지 연간 5만톤의 철강을 생산하였는데, 지금의 청진제강연합기업소의 전신이다.

일본고주파중공업은 1937년에 이원철산의 입철을 전기로 제련하는 제철공장을 청진에 완공하여 철강 및 특수강을 군수용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전쟁시기에 총구용 특수강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전신이다.

구리,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제련소의 경우 남포제련소(일본광업), 홍남제련소(일본질소), 문평제련소(스미토모광업) 등이 북한지역에 건설되었다.

e. 화학공업

북한 동부지역에서는 풍부한 석탄, 석회석, 수력자원을 기초로 석탄화학, 전기화학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비료, 소다, 화약 등의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산업분야에 투자를 한 기업은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1873~1944)의 일본질소그룹이었다. 일본질소는 화학공업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먼저 1925년에 부전강수력발전소(20만kW)를 건설하고, 1927년에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홍남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1933년에 장진강, 1937년에는 허천강 수력개발에 착수하여 함께 12곳의 발전소에서 87만kW의 전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전력을 기반으로 홍남(지금의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전신), 영안(지금의 화성화학공장의 전신), 본궁(지금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전신) 등 3공장을 건설하여, 유안비료, 인조석유, 화약 등을 생산하였다. 이 홍남지구에는 조선질소비료, 조선질소화약, 일본질소홍남유지 등 10개사를 넘는 자회사, 관계회사가 설립되어 종업원 45,000명, 가족을 포함한 총인구 18만명의 대공장지대를 형성하였다.

노구치는 인조석유 생산에도 참여하였는데, 갈탄에서 휘발유를 제조하는 것으로 1935년에 석탄액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석탄공업회사(1941년에 조선인조석유로 개칭)를 설립하고 1936년에 아오지공장을 건설하였다. 지금의 7.7연합기업소의 전

신이다. 연간 5만톤의 액화석유제조능력을 보유하고었는데, 기술개발에 해군연료창, 도쿄제국대학이 적극 관여하였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일본제철검이포제철소, 청진제철소(화학공장)가 유연탄으로부터 벤졸, 나프탈린, 경유, 유안 등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f. 제지공업

북한지역에서 제지공업분야에 진출을 한 중심적인 기업은 오지(王子)제지였다. 오지제지는 1917년에 조선제지를 설립하여 주로 압록강 연안에 풍부한 목재를 원료로 한 제지공장을 신의주에 건설(현재의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의 전신)한 바 있으며, 동해안지역에 대해서는 1935년에 북선제지화학공업을 성진항 북쪽의 길주에 건설하였다. 지금의 길주펄프종합공장의 전신이다. 낙엽송을 원료로한 세계최초의 인견펄프공장이 1936년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연산 약 3만톤의 인견펄프 생산능력은 당시 일본제국에서 최대규모로 일본제국내 생산의 36%를 차지하였다.

g. 시멘트 공업

철도, 항만, 댐 등의 건설용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북한지역에 석회석이 풍부하여 일본기업의 시멘트공장 설립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은 오노다(小野田)시멘트였

다. 1919년 평양근교 승호리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현재의 승호리시멘트공장의 전신)하면서 조선에 진출한 오노다 시멘트는 1928년에 석회석 산지인 원산 근처의 천내리에 공장을 건설하여 1936년까지 연산 40만톤의 대규모 생산능력의 설비를 갖추었다. 현재의 천내리시멘트공장의 전신이다. 오노다 시멘트는 1935년에 역시 석회석과 석탄이 풍부한 함경북도 고무산에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시멘트공장을 건설하여 연산 2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지금의 고무산시멘트공장의 전신이다.

기타 시멘트 공장은 주로 북한 서부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오노다 시멘트와 경쟁관계에 있던 우베(宇部)시멘트는 1936년에 조선시멘트를 설립하여 황해도 해주에 연산 37만톤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현재의 해주시멘트공장의 전신이다. 그리고 아사노(淺野)시멘트는 1936년에 조선아사노시멘트를 설립하여 1937년에 황해도 봉산에 연산 18만톤 생산능력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1940년에 증설로 연산 30만톤의 능력을 갖추었다. 지금의 2.8시멘트연합기업소의 전신이다.

h. 내화물 공업

북한지역에 풍부한 마그네사이트를 원료로한 내화벽돌 제조공장이 동해안 지역에 설립되었다. 철강생산을 위한 용광로에 필

요한 내화벽돌은 총독부에 의해 적극 장려되었다. 일본고주과공업은 자회사인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을 1935년에 설립하여 성진에 연산 3만톤 규모의 마그네시아 크링커 공장을 1936년에 건설하였으며(지금의 성진내화물공장의 전신), 시나가와(品川)내화벽돌은 1942년에 조선시나가와내화벽돌을 함경북도 단천에 설립하였는데 지금의 단천마그네시아종합공장의 전신이다.

i. 인프라 개발 및 도시계획

일제시대의 인프라 개발과 도시계획은 일본의 식민지개발 정책에 따라 계획경제(통제경제)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식민지건설의 기초로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 되었으며 특히 철도, 전력, 항만의 정비와 개발이 중심으로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30년대 이후 만주국과 조선 식민지의 경제적 통합을 「滿鮮一如」라는 이름하에 추진하였는데 신의주-안동 개발과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나진항 개발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신의주-안동 개발은 수풍댐 건설을 통한 전력의 확보와 공업단지 조성 및 다사도 항만개발을 통한 만주~조선서부지역 통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나진항은 만철이 개발하여 도문~나진간의 철도를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서 만주~북한지역 통합개발을 통해 일본 제국의 대륙진출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단둥지역 개발, 동변도철도 건설, 두만강지역개발이나, 북한이 추진한 바 있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도 상기의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개발계획에 근거한 바가 크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은 식민지적 공업체제 육성과 만주지역과의 경제연계, 만주~북한 동북지역~일본을 연결하는 수송로 개발을 위해, 즉, 일본의 국익과 일본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점이 지금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먼저, 철도의 경우 북한지역에서는 한일 합방 전에 건설된 경의선과 함께, 경원선, 함경선, 평원선, 만포선이 일제시대에 북한지역에 새로이 형성된 5대 철도노선이며 동해선이 한반도 동해안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상에서 추진되다가 북한지역에서만 완공된 상태로 일본의 패전과 함께 중지되었다. 기타 민간의 사설철도회사가 광산 및 삼림개발에 필요한 단거리 철도노선을 건설하였다. 일제가 한반도에 건설한 철도의 총연장은 6,497km인데 그 중 북한지역에 4,009km 남한지역에 2,448km가 건설되어 북한지역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산업적 필요에 따라 철도망이 더 조밀하게 구성되었다.

둘째로, 전력의 경우, 일본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전력개발과 송배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전력사업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전력선행형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기간산업인 전력이 북한지역의 풍부한 수력자원 개발에 힘입어 각종 산업의 유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지형구조와 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보아도 대규모인 수력발전은 북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석탄 화력발전은 남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전력사업은 국가의 통제하에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넷째, 전력의 수요측면에서는 한반도가 일본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은 한반도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전력사업은 주로 북한의 수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북한 지역에 공업지대가 주로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민수용의 전력보급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1941년의 전기보급율(전가구의 전등보유율)은 전국 주요 21개 도시에서 66%에 달하였는데 농촌을 포함한 전국으로는 17.4%에 불과하였다.

셋째로, 항만의 경우, 북한지역에서는 일본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항만으로서 진남포, 원산, 청진항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

고, 만주사변 이후인 1930년대 이후에는 나진, 성진, 해주, 다사도항(신의주) 등이 개축되고, 태평양전쟁이후 동해안의 항만이 동만주 중계화물 수송, 무산철광석의 일본 수송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나진, 청진, 성진, 원산 등 기존 항만 이외에도 단천, 원산북항 등의 개축사업이 추진되었다.

동해안에서는 일본이 1930년대 중반 북선3항(나진, 청진, 웅기)을 동만주지역의 개발물자 수송항으로서 (중국 대련항을 남만주지역의 수송항으로서), 일본과 만주의 연결항으로 설정하여 1940년까지 북선3항을 만철이 일관경영하게 하였다. 나진항의 경우, 본격적인 개발은 일본정부가 1932년 5월에 만주 신경(장춘)~도문간의 경도선의 최종착역을 나진으로 결정하면서부터이다. 1932년 8월에 항만과 철도의 건설이 만철에 지시되어 만철이 1933년 4월에 도문선(도문~웅기) 철도를 웅기에서 나진까지의 15.2km를 연장하는 공사(1935년 11월 개통)와 함께, 나진항을 연간 화물처리능력 300만톤의 대형 항만으로 건설하는 제1기 5개년 공사를 시작하였다. 1935년 11월 제1부두의 완성과 함께 만주국 도문세관사무소, 해사출장소, 국제운수창고 등을 갖추고 나진항은 개항장이 되었다. 이로부터 만철이 직접 경영하는 나진항은 만주직통열차를 통해 북한지역 동북부에서 중국 동만주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주요한 상업항의 역할

을 담당하였다. 나진항은 1938년에 300만 톤 화물처리능력을 갖춘 근대적인 항만이 되었다. 그러나 공업지대 개발이 부진하여 나진 시가지 개발과 나진항의 추가 개수가 지연된 상태에서 패전을 맞았다. 나진항의 주요 화물은 중국화물이어서, 당시 “방은 갖 추어져있지 않은데 현관만은 훌륭하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해방전에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자산은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GHQ(연합국 군총사령부)의 시산으로 891억2천만엔(당시 환율로 1달러=15엔)이었고, 이중 북한 지역에 남은 자산은 462억2천만엔으로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8조엔을 넘는 규모라고 한다.

2) 전후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1950년대에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광산물, 금속, 수산물 등 1차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수요가 있었다. 해방과 전쟁후 북한도 식민지 시대의 일본 설비의 개보수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일본의 기계설비를 들여오고자 하는 경제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교가 없는 가운데에도 일본무역상사들에 의해 북일간 무역이 개척되었다.

1955년 10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일본의 도쿄물산(東工物産), 토호상회(東邦商会), 와코교역(和光交易) 등 3개 무역상사와 북

한의 조선무역회사 북경사무소 사이에 거래상담이 이루어져 북일간 민간급의 거래협정서가 조인되었다. 구체적인 품목으로서는 북한이 무연탄, 형석, 콩 등 23개 수출품목, 일본이 전기자재, 종이, 어망, 의료기기 등 기계공구, 섬유류 등 수출품목이 제시되었다. 일본정부(당시 하토야마 내각)는 북한과의 무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북일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져 1956년 3월에는 일본의 무역업체가 공동으로 북일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조무역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일조무역회는 일본국내의 대북무역업체의 대표단체로서 1993년에 해산(동아시아 무역연구회에 통합)될 때까지 북일무역 실무의 중심적인 존재로 되었다.

1956년 6월에 도쿄물산, 토호상회, 와코교역, 미나토상점(湊商店) 등 무역상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무역회사와 대련경유의 거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27일에 이 거래를 위한 제1선으로서 토호상회가 수입한 무연탄 3,000톤을 실은 일본선박이 일본에 입항하였다. 이 날이 간접무역 방식을 취한 북일무역의 역사적인 개시일이다.

1960년 7월에 등장한 이케다 내각은 사회주의권과의 교류를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실시하는 정책 전환을 이루었다. 한국의 이승만정권 붕괴라는 요인도 작용하여, 북일

간의 무역을 직접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케다 내각이 1961년 4월부터 북일간 직접무역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직접무역이 정식화됨에 따라 1962년 11월에는 일본의 세이와해운(正和海運)과 조선대외운수회사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어 북일간의 정기화물선이 취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직접무역결제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63년 9월에 미즈이은행과 북한의 무역은행 사이에 처음으로 코레스계약이 맺어지고, 1964년 6월에는 스미토모은행이 무역은행과 코레스 계약을 맺었다. 1963년 2월에는 일조무역회와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사이에 「조일양국상사간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 체결되었다. 연불수출거래도 성사되어 1964년에는 교호통상(協邦通商)이 북한에 강재를 수출하는데 1년 후불, 산소분리기 수출에 2년 연불의 허가를 1965년에 토코물산(東工物産) 염화비닐중합장치 수출에 3년 연불 허가를 얻었다.

일본의 주요한 수출품은 기계류, 강재, 화학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컸고, 북한의 수출품은 철광석, 무연탄 등 광산물이 중심이었다. 북한의 무산철광석은 1963년 36,000톤을 시험수출한 이후 1964년 35만톤, 1965년 42만톤이 일본에 수출되었다. 1965년 5월에는 평양에서 「평양일본상품전시회」가 열려, 78개 제조회사, 20개 상사가 출품한 공작기계, 계측기, 광산건설

기계 등 360점 중 약98%에 달하는 2억 5,000만달러가 매각되었다. 이 전시회에 1만명을 넘는 북한의 기술자가 참관하여 북일간의 기술교류가 촉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등 '동서대탕트'라는 새로운 정세하에 일본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북일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일정기각료회의(1971년 7월)에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사이에 인적교류도 단계적으로 활발히 해갈 것"이라고 하여 북한과의 교류추진을 정부레벨에서 분명히 하였다. 북한도 서방자본주의권과의 무역을 확대하여 특히 자본재의 수입확대를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한 「6개년 계획」의 실시를 위해 각종 플랜트 설비를 서방국과 일본에서 구입하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72년 2월 일본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북한의 무역대표부 기능을 「주식회사 조일수출입상사」에 위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일수출입상사는 동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명칭은 「상사」였지만 본국과의 직접거래는 하지 않고 무역대표부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무역전문상사인 토코물산(東工物産), 토호상회(東邦商會), 교호통상(協邦通商) 등과 더불어, 일본 대기업

도 북한과의 무역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마루베니(丸紅) 계열의 와코교역(和光交易), 스미토모(住友) 계열의 다이카무역(大華貿易), 미즈비시(三菱) 계열의 메이와산업(明和産業), 이토츠키(伊藤忠) 계열의 신에츠통상(新越通商), 미즈이(三井) 계열의 싱와물산(新和物産) 등이 일본 대기업들이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무역상사로서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하였다. 또한 동해상사(東海商事, 1961년 설립), 경화상사(慶和商社, 1966년),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1969년) 등 재일조선총련계 무역회사들도 북한과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정부의 정책변화도 있어 일본무역업계의 대북 진출은 활발히 전개되어, 북일무역액도 1974년에 3억6,000만달러에 달해 1971년의 6배로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1972년 이후 일본의 수출급증에 따라 일본의 무역흑자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흑자는 1986년까지 계속되었다. 무역결제 통화는 1973년 이후 국제적인 통화변동문제로 인해 영국파운드 기준에 스위스프랑을 보조통화로 했던 결제방식을 바꾸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각국의 통화를 북일간에 합의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제1차 세계석유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불황에도,

북한은 기계, 설비, 플랜트 등의 수입을 대폭 늘렸으나, 이에 비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여 수입과 수출의 균형이 깨지면서, 북한의 외화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1974년부터 북한의 무역결제지연이 나타났고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했던 많은 중소기업 무역상사가 지불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에 일본수출입은행은 수출용자 제공을 거부하고 통산성은 수출보험업무를 중단하였다.

1977년 3월에는 일본에 「일조무역결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채무문제에 관한 일본무역업계의 공동 대응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1983년 6월까지 원금의 일부인 0.9억 서독마르크(약 100억엔)와 금리를 합쳐 약 300억엔을 상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지하였다. 1983년 7월 현재의 북한의 일본에 대한 미결제채무원금은 약 6.1억 서독마르크였다. 이후 미상환에 따른 이자를 감안하면 2009년까지 북한은 원금 및 이자로 약 12억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 1986년 9월 일본 무역회사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수출대금에 대한 수출보험을 정부에 구상 요청하여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이 약 300억엔을 해당기업에 지불하였다. 해당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보험당국에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 후 일본기업의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관심은 회소해지고, 재일조선상공인계무역상사의 대북 무역이 북일무역의 중심으로 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심각한 외화부족은 여전하였지만 일본산 기계 설비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있고, 수산물 등의 대일수출 증가와 위탁가공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형태의 등장으로 북일무역은 건조한 실적을 유지하였다. 1985년 이후 엔고에 따라 엔화기준의 무역액은 감소경향을 보였지만 달러기준의 무역액은 1990년대 중반까지 건실하였다. 일본의 대북 수출품은 기계류 수출이 1986년이후 대폭 감소한 대신 섬유제품의 위탁가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북한 경제가 자원공급부족, 외화부족, 식량부족 등 경제 위기에 빠져들게 되면서 북일무역도 퇴조하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2000년 전후로 북일무역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감하면서 2005년은 2000년 무역액의 절반 이하인 1.9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의 북일무역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의 투자의 경우, 일본기업의 투자는 전무하다.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 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일본에 대해서도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1980년 설립, 1993년에 일조무역회의 업무인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1985년 11월과 1986년 5월에 대표단을 북한을 파견하였으나, 북한과 일본기업과의 합영사업 추진은 1983년 이후 대일무역채무 상환이 중단된 것으로 인해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3년말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대부분이 총련계 재일동포상공인의 합영사업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재일동포의 투자를 중심으로 140여건, 약 1억 5,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이외에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로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북한과의 나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96년 9월과 1998년 10월에 나진선봉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에 참가단을 파견하였지만, 채무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01년과 2002년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 국제전람회」에 일본기업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2001년의 전람회(2001.5.7~10)에 일본기업은 10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주요 출품 품목은 제봉용 미싱, 가정용 잡화, 종묘 자동차, 광산기계, 풍력발전(판넬 및 영상전시) 등이었다. 2002년의 평양 국제전람회(2002.5.6-9)에 일본기업은 공업용 미싱, 의약품, 종묘 등의 상품전시와, 자동차, 건설기계, 식품가공기계, 농업기계, 산업폐기물재처리 설비 등에 대한 영상 및 카타로그 선전을 행하였다. 이러한 전람회를 통해서 북일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기업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전반까지는 무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매우 열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광산물을 중심으로 1차산품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일본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기계와 설비에 대한 북한측의 수요도 컸기 때문에 북일간의 무역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매력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북한산 금속류 및 광물에 대한 일본내 수요가 점차로 줄어들고 일본이 수출한 기계설비 대금을

북한이 갚지 못하는 채무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기업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식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과 일본간의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일본기업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반면에 총련계 재일동포 기업들의 북한과의 무역 및 경제합영사업은 일본기업의 빈자리를 메꾸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총련계 기업이 진행한 것이었으며 1991년 12월에 선포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총련계 기업이 진행한 것이었다. 북한은 총련계 동포기업과의 합영을 통해 세계무역시장에 대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향후 일본기업이 북한에 투자진출할 수 있는 길은 북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거나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며 일본기업에 채무변제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북한은 채무변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공시켜 그 이윤으로 채무를 회수해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채무를 먼저 변제받지 않는 한 추가 투자를 기피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북일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유일한 길은 조속한 국교정상화일 것이다. 북일수교가 이루어지면 약 12억달러에 이

르는 북한의 대일본 채무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북일간의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하는 수교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산업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교가 수립되면 경제협력자금을 포함한 수교자금, 대일 채무문제의 일괄타결, 무역보험과 수출입은행의 용자 허용, 특혜관세제도 적용, 기타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양국간의 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Ⅲ. 북일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 전망

1.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시의 경제관계에 대한 양국의 입장

북일 정부간 국교정상화 교섭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A. 제1라운드(1990년~1992년): 북한의 공세, 일본의 방어→북한의 양보, 그러나 북미간 핵문제 등 발생으로 교섭 중지

이 시기의 교섭에서의 쟁점과 북한의 입장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북한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근본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도, 북한의 관할권을 한반도 절반으로 한정하고 국교정상화를 먼저 이루자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교전관계에 의한 배상」 또는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의 주장을 거두고 「가해국으로서의 보상」 요구하여 보상문제에서도 일정한 양보를 보였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요구한 남북대화 진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핵보장조치협정 체결 등의 전제조건을 1992년 1월까지 달성하였다.

b. 일본은 보상에는 응하지 않고, 한일조약과의 정합성으로서 재산청구권으로 정리하자는 주장에 변함이 없었고, 국교정상화를 먼저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c. 1993년부터 북한의 외교정책의 중심은 북일국교 정상화에서 북미관계로 옮겨졌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한반도에서 다시 긴장이 조성되자 북미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교섭도 중단되었다.

B. 제2라운드(2000년): 냉전후 동북아시아 안전보장구상의 변화→미일동맹 강화로 귀결→합의 없음

제1라운드에서 북한이 전쟁배상과 전후 보상 요구를 거둔데 이어 제2라운드에서 북한은 일본의 공식문서에 의한 사죄와 식민

〈표 2〉 제1라운드 (제1차~제8차 북일국교정상화 교섭) 의 내용

회담구분	일시(장소)	내 용
예 비 회 담	1990년 11~12월 (북경)	의제합의 ① 기본문제(관할권, 합병조약의 합법성 등) ② 경제적 제문제(보상, 재산청구권 문제 등) ③ 국제문제(핵사찰, 남북대화 등) ④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가진 제문제(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일본인처 고향 방문 등)
제1차회담	1991년 1월 (평양)	북한 : 일본의 외교문서에 의한 사회, 식민지시대의 보상과 재산청구권, 교전 국간의 배상 요구, 문화재 반환, 전후 45년간의 보상 요구 일본 : 북일간은 전쟁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을 할 수 없음, 전 후보상의 의무는 없음. IAEA와 핵보장조치협정의 체결 요청
제2차회담	1991년 3월 (도쿄)	북한 : 핵사찰문제는 북미간의 문제. 「한일합병조약」 등 과거의 조약은 일본의 무력침략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무효. 일본 : 과거의 조약에 대해, 당시는 유효하게 체결되고 실시된 것. 경제적 제 문제는 재산청구권으로 처리
제3차회담	1991년 5월 (북경)	북한 : 기본문제에 합의하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후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방식 제안. 북한의 관할권이 한반도의 반에만 미치는 것을 인정. 일본 : 일괄해결로 정상화 입장. 남북대화의 진전, 남북한의 유엔동시기입, 핵 보장조치협정체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 의제외 문제로서 「이은 혜」의 생존여부를 조회
제4차회담	1991년 8월 (북경)	북한 : 일본은 한반도비핵지대화안을 지지해야함 일본 : 재산청구권 범위내에서 물적피해를 고려. 재산청구권에는 증거물품이 있는 경우에 보상함
제5차회담	1991년 11월 (북경)	북한 : 인적, 물적피해의 가해국인 일본이 보상해야함 일본 : 핵사찰문제와 남북대화문의 진전을 요구
제6차회담	1992년 1월 (북경)	북한 : 일본의 요구(남북의 유엔가맹, 남북대화, 핵보장조치협정체결문제 등)를 모두 해결했음 일본 : 공동문서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내용을 반영해야함
제7차회담	1992년 5월 (북경)	북한 : 일본은 「한일조약파의 정합성」 주장을 철회해야 함 일본 : 핵문제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곤란함
제8차회담	1992년 11월 (북경)	북한 : 일본은 보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일본 : 「이은혜」 문제제기로 회담 결렬됨

지 지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의 「사과」에 근거한 대북한 사죄와 「경제협력방식」의

한 과거청산을 제시하였다. 제2라운드에서의 북한과 일본 쌍방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2라운드에서의 북일간의 쟁점

제2라운드	북한	일본
기본인식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맺는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한다
사죄	북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문서에 사죄를 명기해야한다.	“통절한 반성과 오와비(사과)”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의 대아시아담화가 기본이며, 이를 북한에 대해 표명한다.
보상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 과거의 정신적, 물질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8월의 10차회담부터 보상으로 통일, 그전까지는 배상과 보상을 혼용)	한일합병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 과거의 북일관계는 교전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배상이나 보상에 응할 수 없다. 그 대신 한일관계에 적용했던 재산청구권 형태의 경제협력방식으로 처리한다.
납치의혹	납치는 있을 수 없다. 단 행방불명자 조사는 인도적 견지에서 상호협력하여 진행한다.	납치의혹문제를 뒤로 미루고 국교정상화는 할 수 없다.

〈표 4〉 제2라운드 (제9차~제11차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의 내용

회담구분	일시(장소)	내용
제9차 회담	2000년 4월 (평양)	북한 : 과거청산의 4개항목 요구 ① 일본정부의 공식문서에 사죄를 명기 ② 인적, 물질손실에 대한 보상 ③ 문화재의 반환과 보상 ④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보장 일본 : 사죄는 「무라야마담화」로 끝났으며, 보상문제는 재산청구권으로 처리.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간의 현안 모두가 협의의 대상임.
제10차 회담	2000년 8월 (도쿄)	북한 : 과거청산이 최우선의 과제임 일본 : 사죄는 “무라야마담화”로 끝났으며, 보상문제는 재산청구권으로 처리.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과거청산
제11차 회담	2000년 10월 (북경)	북한 : “사죄와 보상” 문제를 우선 처리 일본 :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과거청산(「한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국교정상화와 납치문제의 해결을 일괄적으로 처리

C. 제3라운드(2002년~2004년) : 북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양보로 합의→그러나 결과 없음

제3라운드는 북일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식의 국교정상화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의 방식에 대해 「일괄해결, 경제협력 방식」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본 외무성의 해석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

〈표 5〉 제3라운드 시기의 중요 사항

1) 북일정상회담 및 북일공동선언(2002년 9월 17일, 평양)
a.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한 “납치” 인정과 사죄
b. 청구권의 상호포기, 국교정상화후에 무상자금협력 등의 경제협력 *“일괄해결, 경제협력 방식”(일본측의 해석)
2) 5명의 납치피해자 귀국(2002년 10월 15일)
3) 제2차 북일정상회담(2004년 5월 22일, 평양) : 납치피해자의 가족 귀국

한 사유에 근거한 양국 및 그 국민 모두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이에 따라 소위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금전지불을 포함하는 모든 청구는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함과 동시에, 이에 병행하여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협력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은 1965년의 한일간 국교정

상화 방식과 1972년의 중일간 국교정상화 시의 방식-청구권의 상호 포기, 일본의 경제협력 명기 없으나 사실상 ODA 경제협력 실시-을 활용한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민간인의 보상 및 청구재판의 근거를 없앴던 바가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일본측이 해석하고 있는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

〈표 6〉 제3라운드(제12차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의 내용

회담구분	일시(장소)	내 용
제12차회담	2002년 10월 (쿠알라룸푸르)	<p>북한 :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이 중핵적인 과제라고 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성실하게 대응. 피해자 5명이 일단 북한에 되돌아와 귀국은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의사로 결정할 것 2)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문제의 본질 3)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 논의 요구 <p>일본 :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납치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해야함 2)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는 IAEA보장조치협정의 완전이행을 위한 사찰의 즉시 수락.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 중 이미 배치 완료한 미사일 폐기 3) 경제협력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

는 금전지불을 포함하는 모든 청구는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일괄해결〉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제3라운드까지 전반적으로는 일본은 사죄를 공식으로 인정하되 “먼저 현안을 해결하고 나중에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북한은 “사죄와 보상”의 원칙을 유지하는 외에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D. 제4라운드(2006년 이후) : 북일 양자간 협상지속과 6자회담에서의 북일 양자간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구성→일본의 납치문제 우선해결입장으로 진전 없음

두 차례의 북일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실무협의(2004년 8월, 9월, 11월) 및 북일정부간협의(2005년 11월, 12월)를 거쳐 2005년 12월에 양국 정부간에 ① 「납치문제 등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 ②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③ 「국교정상화 교섭」 등 3개 협의를 포괄적으로 병행하여 논의한다는 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2월에 북경에서 제1차 북일 포괄병행회의가 개최되었다. 북한은 과거청산이 경제협력만으로 변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문화재 반환과 보상, 개인의 인적, 물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은 납치문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최우

선 해결과제로 한다는 입장에 굽힘이 없었으며,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일괄해결,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과,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로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협력방식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협력으로만 과거청산이 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하였다.

2007년부터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6자회담 틀을 활용하여 설치된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7년에 열린 두 번의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이 경제협력 이외의 보상을 제기하였으며, 일본은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으로 과거청산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북한과 일본의 견해차이가 분명해진 시기이다. 2008년에 두 번의 북일 실무자협회가 이루어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우선해결 원칙에 대해 북한이 재조사 수용이라는 양보를 합의하였지만, 결국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2008년 10월에 재연장되고 북한도 납치 재조사 무기연기라는 대항을 하면서 국교정상화교섭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2009년 9월 1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회견한 북한의 송일호 조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2002년의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북일간 협의전체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일간의

〈표 7〉 제4 라운드 (북일포괄병행회의 및 6차회담 북일간 실무회의)의 내용

회담구분	일시(장소)	내 용
제1차 북일포괄병행 회의	2006년 2월 (북경)	<p>북한 : 과거청산에서 경제협력만으로는 불충분. 문화재 반환과 보상 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일괄해결하여 국교정상화가 실현된 후에 경제 협력, 납치 문제의 진전없이 국교정상화도 없음. 2)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①생존자의 귀국, ②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약속, ③납치용의자(신광수, 김세호 등)의 인도 등을 요구 3)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의 방식, 경제효과 등에 대해 설명
제1차 북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6차 회담 틀)	2007년 3월 (하노이)	<p>일본측의 납치문제 우선해결 주장으로 결렬</p> <p>북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측의 성의와 노력으로 모두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2) 일본의 국교정상화에서의 경제협력은 「보상」임 3) 식민지시대의 강제연행, 학살,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청구권포기”에서 제외하며, 경제협력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함 4) 과거청산의 개시와 재일총련탄압 중지, 6차회담공동선언이행을 요구 → 일본이 응한다면 “납치재조사” 실시 고려 5) 식민지시대의 약탈문화재의 반환과 재일조선인의 지위개선 요구 <p>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일정상회담」은 일괄해결의 합의임 2)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①모든 납치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보장과 신속한 귀국, ②진상 규명, ③납치피해자의 인도 등을 요구 3)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①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사항의 해결이 전제, ②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
제2차 실무회의	2007년 9월 (울란바토르)	<p>합의 :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향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 실무 회의를 가능한 빈번히 개최</p> <p>북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청산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 개별의 인적, 물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2)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 (3) 문화재반환 문제 2) 납치문제:해결된 일임. 재조사는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논의할 수 있음 3) 총련탄압의 중지를 요구 <p>일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청산:북일평양선언에 합의된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에 기초하여 대응함 2) 납치문제:납치문제의 해결이 불가피 ①모든 납치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보장과 신속한 귀국, ②진상 규명, ③ 납치피해자의 인도 등을 요구 3) 조선총련문제: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의 경매신청은 국내법에 근거한 절차임

회담구분	일시(장소)	내 용
북일실무자 협약	2008년 6월 (북경)	합의 :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 일본은 경제제재조치 부분해제(인적왕래의 부분해제, 항공전세기편왕래규제 해제) 북한 : 과거청산의 해결과제로서 ①국교정상화후의 경제협력, ②문화재반환 과 보상, ③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 제기 일본 : 납치문제에 대해 ①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 ②진상 규명, ③납치피 해자의 인도 등을 다시 요구 국교정상화방식에 대해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 다시
북일실무자 협약	2008년 8월 (심양)	합의 : 각기 관심사항에 관해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협의하고 성실히 노력

대화재개 용의를 시사하였다. 앞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북일간의 합의와 과거청산에 대한 합의를 북한당국과 일본 신정부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주목된다.

2.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자금 논의의 본질

위에서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교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91년의 제1차 회담 시기부터 경제협력방식의 국교정상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2002년의 북일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해석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협력방식에 합의한 바 있고, 2006년의 제1차 북일 포괄병행회의에서 일본측은 경제협력방식의 구체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일본정부의 대북한 경제협력방식의 국교정상화 정책을 한국과의 수교협상에

비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한국과의 마찰 없이 북한과의 수교 여지를 남겨 두었다.

둘째, 한국에 대하여 '전쟁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였다.

셋째, 경제협력방식의 수교는 한국과 중국에 적용한 바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일괄 해결을 전제로한 경제협력방식을 관철한다.

먼저,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이다. 한일수교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주: 일본어 원문에 의함)

제3조, 대한민국정부는 유엔총회결의 제 195호(III)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조선

(주: 한반도)에 있는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유엔총회결의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명시했다고 교육받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더욱이 북한도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을 부정하였다고 해석하면서, 동 조약이 무효임을 정부성명으로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상기 유엔총회결의 제195호(III) 〈1948.12.12〉의 내용은, “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전 한반도의 다수 인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과 사법권을 지닌 적법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한다”였다.(Resolution on Korea for the United General Assembly Establishing the U.N. Commission on Korea, December 12, 1948) 즉, 38도선 이남지역에서의 합법정부의 수립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 같은 인식을 한국에 주면서도 유엔총회 결의에 근거한 것으로 하여, 국제법적으로 북한과 추후 수교협상이 가능(한일수교조약의 개정 없이) 하도록 배려했다.

둘째로, 한국과의 수교에서 「전쟁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 국제법이란 다름 아닌 1951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연합국간의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즉, 「일본이 전쟁 중에 일으킨 손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해야할 것을 승인한다.」〈제 14조 (a)〉고 규정하면서도, 연합국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모든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제 14조 (b)〉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제부흥을 통해 사회주의권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국제경제시스템을 재편·부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Korea)은 연합국의 성원이 아니었으므로 동 조약의 체결 대상국에 해당되지 않는 대신, 조약의 수혜국으로서 “일본이 한국(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Korea)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제2조(a)〉하는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 조약의 제21조 별도 규정에 따라, 한국(Korea)은 청구권 중에서 전쟁배상청구권은 해당이 없고 「재산청구권」만을 보장받게 되었다. 재산청구권이란 일본정부 및 국민에 대해 한국(Korea)측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채권 포함)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권이다. 반면 중국은 전쟁배상청구

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나, 중화민국(대만)이 일본과 수교(1952년)하면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1972.9.29)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조인한 49개국 중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등 4개국은 일본에 배상청구권을 요구하여 배상금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한일수교조약의 전문에 명기하고 이에 따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경제협력의 형태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산업차관 3억달러를 제공함으로써, 한일간의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일간의 수교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고, 한국정부가 청구권자금으로 해석한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국이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배상」과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북일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도 이러한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은 일본산 자본재와 원자재 및 용역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한국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일본 의존(특히 자본재 부문에서)이 구조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에 대한 수교자금 규모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정보는 없지만, 대체로 50억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의 규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0년 10월에 도쿄신문은 북일수교자금으로 약 90억달러(당시 기준 1조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2000.10.26). 그 내용으로는 무상공여 50억달러, 유상차관 30억달러 대북채권 상계 10억달러로 되어있다. 또한 일본경제신문은 한일수교시의 5억달러를 참고로 이후의 일본내 물가상승률과 환율변동을 고려할 때 2000년 8월 현재 약 67.2억달러가 된다는 추정치를 보도한 바 있다(2000.10.18).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50~100억달러의 자금협력이 예상된다(의회조사국 보고서, 2000.6월)고 보고하고 있다.

3. 북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경제협력 전망

북일국교정상화로 일본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협력자금 규모를 1조엔(2009년 기준 약 100억달러)으로 가정하는 경우, 북일간의 무역채권을 2009년 기준으로 약 12억달러로 책정하면 이를 상계한 88억달러가 경제협력자금으로 된다. 이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10년간 분할제공하는 경우 매년 8.8억달러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겠다. 이 규모를 북한의 2008년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면, GDP 262억달러의 3.3%, 무역액(한국과의 교역포함) 56억달러의 15.7%와 정부예산 35억 달러의 25.1%를 차지한다. 이 규모는 북한으로서 경제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큰 규모라고 하겠다.

또한 국교정상화에 따라 정부간 경제협력

과 동시에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었던 관세차별이 해소되고,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및 해외투자금융의 적용, 직접투자 개시와 같은 형태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에 있어서는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특혜관세 등)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적용해왔던 「국정세율」 대신에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특혜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이 관할하는 무역보험에 대해서는 1975년 이후 북한에 대한 무역보험인수기준이 '보험인수 정지' 또는 '미설정'으로 되어있었고, 단기보험에 한해 「특정제한국」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무역보험을 중지하였던 방침을 바꾸어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방침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금융은 무역보험의 가입이 전제가 되어 있어 무역보험이 재개되면 수출금융도 재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금융은 국교정상화 전단계에

〈표 8〉 일본의 해외투자금융

일본기업에 대한 국내용자 경우의 용자대상		
①	출 자 자 금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금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
②	융 자 자 금	해외현지법인 또는 합영 파트너 등에 대한 용자에 필요한 자금
③	해 외 사 업 자 금	외국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외국에 직접 용자하는 경우		
일본계 합영기업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장기운전자금 포함)을 직접 용자. 또한 일본계 합영기업에 출자 및 용자를 하는 상대국 정부 등에 용자를 함으로써 상대국측의 자금조달을 측면에서 지원.		

자료: 국제협력은행 홈페이지

〈표 2-8〉 북일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 및 대상지역

구 분			내 용	주요대상지역
인도성 지 원	식 량 지 원	식량, 농업생산	식량, 종자개량기술, 비료 등 지원	전지역
산 업 생 산 정상화	전 력 생 산	발전정상화	송배전설비 개선, 소형자가발전기 제공, 발전용 중유제공	전지역
	원 자 재 제 공	섬유, 석유화학, 금속, 전기전자, 건설	건설자재, 석유화학공업원료, 플라스틱, 철강, 종이, 기계부품, 전기기기부품	전지역
	자 본 재 제 공	광업, 금속, 기계, 화학	광석채굴설비, 탐사장비, 수송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전지역
	농 수 산 개 발	농업, 축산	농업기술 지원, 비료공장개량, 수해방지대책 기술,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지원, 축산 기술 지원 및 사료공장 건설	감자생산기술 : 함경도, 강원도, 비료공장 : 흥남
		어업	어선, 어업장비개량, 수산물가공공장건설	수산물가공공장 : 나진, 청진, 원산
산 업 인프라 개 발	전 력 생 산	발전소정비 및 건설	수력발전소 개축 및 보수, 석탄발전소 건설	수력 : 수봉, 함경도 선탕 : 나진
	물 류, 교 통	철도	철도시설현대화, 역사정비, 시스템전산화	전지역
		도로	도로포장, 도로 신설	전지역
		항만, 공항 항로개설	항만정비, 하역설비현대화, 공항정비 해상항로 : 원산~니이키타, 나진~청진~니이키타~마이즈루, 원산~사카이미나토, 남포~마이즈루항공로 : 평양~도쿄, 원산~오사카	항만 : 나진, 청진, 원산 공항 : 평양, 청진
		통신	유선통정비, 통신시스템 효율화	전지역
	공 업 단 지		나선시 등의 기반시설정비(용수, 전력, 통신, 교통), 청진 및 원산 항주변 공업단지 정비, 제도 정비	나선, 청진, 원산
	인재육성 및 지적교류	기 술 교 육		기술전문학교 설립, 학교실험시설 정비
지 적 교 류		각종 연구소설비 자료 제공	평양, 원산	
생활기반시설, 환경협력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스템정비, 의료시 설정비, CO ₂ 삭감, 유해물질배출억제 등 환경보 호사업	전지역

자료: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필자 작성

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본기업의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다. 국교정상화후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해외투자금융도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해외투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활용된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정부내에서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다. 다만, 한국의 경험과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실상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우선분야가 설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①긴급지원성 협력분야, ②산업생산정상화 분야, ③산업 인프라 정비협력 분야, ④인재육성, 지적교류분야, ⑤생활기반시설 및 환경협력 분야 등이 고려될 것이다. 특히, 인재육성 및 지적교류분야, 생활기반시설 및 환경협력분야는 세계은행과(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투융자에서 중시되는 분야이며 일본의 ODA정책에서도 중시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주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협력분야는 산업시설 현대화, 인프라 정비와 환경협력을 세 축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산업시설 현대화, 그리고 환경보호 및 인재육성

등의 순서로 자금이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정비에서는 발전소의 재건설과 송배전 등의 관리시스템 개선, 철도 및 도로, 항만 정비, 통신 시스템 효율화 등이 중요한데 기존설비의 보수보다는 새로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려할 것이다. 산업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출산업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우위의 측면을 고려한 분야로서, 비철금속, 시멘트, 조선 및 선박수리, 수산물가공 등이 주요한 현대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구상이 가능하다.

국교정상화 후 중단기의 북일간 경제협력에서는 다국간의 경제협력 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일본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a. 두만강지역개발계획(GTI)정부간회의에 일본의 공식 참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일본이 참가하는데 지장이 되어온 북일간 미수교가 해결됨에 따라 일본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다국간 협력틀에서의 북한 동해안지역인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b. 북한에 대한 다국간 「지원조정그룹」(Aid Coordination Group)설립

북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하게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북한의 경제개발에 협력할 수 있는 관계국이 다국간 「지원조정그룹」을 설립하여, 재원조성과 지원분야의 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원조정그룹」은 수혜국에의 원조조정을 위한 세계은행 또는 유엔개발계획(UNDP)등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 관계국가가 ODA자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다국간 지원협회의 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국간 협력

북한은 일본정부의 협력으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통계의 제출, 경제정책협회의 수용을 받아들이고 국제금융기관의 공적자금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세계은행그룹(IBRD, IDA)의 양허성(concessional)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는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은 무상지원환산율(grant element)가 80% 이상이며, 최장

40년 정도에 걸친 장기 분할상환이라는 우대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일본은 ODA자금의 일부로 (가칭) 「북한특별신탁기금」 등의 기금을 관계국과 함께 설치하여 다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과 일본간의 식민지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경제관계와 국교정상화교섭시의 경제문제 입장과 수교후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물론, 과거 역사의 청산이 경제협력으로 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경제협력만으로 등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제연행문제, 위안부 문제,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나타날 경제협력을 북한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진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먼저 법, 제도, 인프라 등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외자유치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는 진행해오면서 인프라 정비는 재정상의 문제로 투자자에게 일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 점이 외국투자자에게 북한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비추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일간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북한의 재정능력을

높이고 사회인프라 정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향후 다가올 일본과의 수교에 대비한 경제개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며,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 북일간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틀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K**